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지정학:

미중 AI 혁신생태계 경쟁과 종건국 한국의 소버린 AI 전략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AI 시대의 디지털 지정학

최근 차세대 인프라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에너지·그린테크, 보건·바이오, 쿼텀 기술 등도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경쟁의 양상은 디지털 경제, 공급망 안보, 사이버 안보, 우주 안보, 첨단 방위산업 등의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이들 기술 경쟁의 향배를 국가안보의 프레임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디지털 기술 이슈가 그 자체의 중요성을 넘어서 지정학 경쟁의 시각에서 그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그야말로 ‘디지털 지정학’의 시각이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디지털 지정학적 관심의 핵심을 차지한 것이 AI 기술이다. 모두 다 AI로 수렴되는 듯한 모습이다. AI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이는 ‘범용기술’이며, 인간의 육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을 높여주는 ‘증강기술’인 데다가, 경제와 산업 및 기타 사회 시스템 전반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선도기술’이다. 이러한 AI 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AI 전환(AX)’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했다. 그야말로 AI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삶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국제정치 전환에도 미치고 있다. AI의 영향은 권력과 국가, 경제와 산업, 외교와 규범, 안보와 전쟁, 그리고 국제질서의 변화에까지 미치고 있다.

현재 부상하는 AI 분야는 민간 검용의 전략적 함의를 지닌 첨단부문이며, 이 분야에서 진행되는 경쟁의 승패는 미래 글로벌 패권경쟁 전반의 향배를 엿보게 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국제정치의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AI 분야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 미중 AI 경쟁은 좁은 의미의 기술경쟁 시각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다. 기술만 앞서는 게 아니라, 표준과 플랫폼, 생태계도 주도하고, 정책 차원의 규제와 안보담론 및 국제규범의 형성도 이끌어 가며, 더 나아가 AI 기반 외교와 전쟁에서도 승리하기 위해 벌이는 다차원의 경쟁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친 경쟁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라 말해도 어색하지 않다.

미중 AI 패권경쟁에 담긴 국제정치 전환의 복잡한 코드를 읽어 내는 것은 한국과 같은 종건국의 미래 국가전략에 있어 핵심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종건국으로

서 직면해야 할 AI 국가전략의 과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현재 AI 전환이 국제정치에 투사하는 코드는 'AI 지정학'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의 코드다. 지구화 시대의 상호의존과 호혜협력을 넘어서 지정학 시대의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이 득세하고 있다. 지구화 시대의 개방형 협력 질서에서 지정학 시대의 폐쇄형 경쟁 질서로의 전환이 눈에 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AI 시대 디지털 지정학의 양상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AI 혁신생태계 경쟁과 이에 수반하는 디지털 국제질서 구축 경쟁에 주목하고자 한다.

미중 AI 혁신생태계 경쟁

최근 드러난 AI 혁신생태계 경쟁의 성격 변화는 미중 AI 패권경쟁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2021년까지만 해도 개방형 오픈소스(open source) 모델에 기반한 AI 기술개발이 주를 이루었다면, 그 이후에는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하지 않는 추세가 나타났다.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비용이 막대한 데다가 AI 모델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존 오픈소스 기반의 AI 기술들이 점차 공개되지 않게 된 것이다. 현재 이러한 '폐쇄형 AI' 전략을 채택한 측은 미국 기업인 오픈AI와 구글인데, 오픈AI는 챗GPT3.5와 챗GPT4를 '일반 이용자'에게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고, 비용을 내야만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공개하고 있다. 구글도 자사 AI 모델 관련 기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폐쇄형 AI' 전략의 등장 과정에는 중국의 기술 추격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중국 고립화 전략'이 한몫을 담당했다. 미국 기업들의 AI 모델 소스코드 공개가 중국 AI 플랫폼 기업들의 기술 추격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위기 인식이 작용했다. 특히 2021년 기준 전체 7,300만 명의 깃허브(GitHub) 이용자 중 중국 국적이 10%를 차지하게 된 것이, 이러한 견제 전략 출현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자립적인 AI 생태계 구축으로 대응했는데, 세계 최대 오픈소스 플랫폼인 깃허브를 대체할 자체 오픈소스 플랫폼인 '기티(Gitee)'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최근 '폐쇄형 AI'에 도전하는 '개방형 AI' 진영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보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오픈AI와 구글과 같은 선발주자의 거대언어모델(LLM) 기술 독점에 대응하여, 빠르게 이용자 수를 늘려 선발주자를 따라잡으려는 후발주자들의 추격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기업 중에서는 메타가 이러한 오픈소스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메타에 이어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도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LLM을 무료로 공개하는 데 가세했다. 최근 돌풍을 일으킨 답시크도 다른 개발자들이 자사 AI 모델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문제점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공개했다. 이외에도 바이트댄스, 문샷AI, 즈푸AI, 미니맥스 등과 같은 중국 업체들이 오픈소스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 중국산 오픈소스 AI 모델은 데이터 안보 논란에도, 성능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중에서 중국산 AI 모델인 답시크가 국내외에서 일으킨 '쇼크'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답시크의 AI 모델 'R1'이, 오픈AI 'o1' 모델의 18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개발비로 그 성능을 따라잡았다고 알려졌다. 미국이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낮은 사양의 AI 칩을 사용해서 거둔 성과라 더 큰 화제가 되었다. 강화학습 중심 모델 개발이나 '전문가혼합' 기법, 오픈소스 방식 등을 채택해서 비용을 절감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로 거론되었다. 답시크 개발의 주역들이 중국 '국내파' 인재들이고, 이런 수준의 AI 기업이 중국에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알려진 것도 '쇼크'였다. 이에 더불어 '중국제조 2025'를 내걸고 전폭적으로

지원한 중국 정부의 정책도 재조명되었다.

이에 미국 업계는 '제2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라며 놀라움을 갖추지 않았다. 미국 증시가 출렁였고 정치인들도 민감한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나 딥시크 발표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유명 인사들도 있고, 오픈AI는 자사 데이터를 무단 사용한 의혹을 제기하며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조사에 나섰다. 딥시크가 중국 정부의 검열을 받는 정황을 들춰내고, 딥시크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로의 유출 가능성도 경계 대상이 됐다. 딥시크 모델이 수행하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도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그야말로 딥시크 쇼크는 최근 불붙기 시작한 미중 AI 패권경쟁을 더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중 디지털 국제질서 구축 경쟁

역사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개발플랫폼 및 범용플랫폼을 제공하면서 AI 알고리즘 혁신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주도해 왔다. 이에 중국은 미국 AI 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면서 기술추격을 벌여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대한 규모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생성된 로컬 데이터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양상을 보면, 미국이 폐쇄형 전략으로 돌아선 반면, 중국이 개방형 전략을 내세워 세를 불려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난 2년 동안 미국을 따라잡았으며, 앞으로 중국 기업들이 AI 공급망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각기 다른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AI 패권경쟁은 더욱 심화·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미중경쟁의 전선은 AI 기술개발 경쟁에서 AI 생태계 경쟁으로, 더 나아가 AI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여러 층위에 걸쳐서 양국의 플랫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 간 플랫폼 경쟁에 양국 정부까지 가세하면서 '플랫폼 지정학'을 들먹일 정도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서 인터넷이 둘로 쪼개지는 '분할인터넷(Splinternet)'이 출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었다. 이러한 미중 플랫폼 경쟁의 핵심에 추첨 AI 알고리즘 개발 경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AI와 관련하여 내놓은 디지털 국제질서의 구상은 이러한 경쟁의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2025년 7월 23일 미국이 발표한 'AI 액션플랜'이 상징하고 있는 질서 구상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 계획에서 미국은 AI 혁신 가속화와 AI 인프라 구축, 국제 AI 외교·안보 주도 등을 내걸었는데, 이는 AI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자국의 표준을 세계로 전파하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이른바 '풀스택(full-stack) AI 패키지'의 구상은 중국 견제를 목표로 미국의 AI 생태계를 동맹국들에 부과하려는 패권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해석되었다. 과거 1980-90년대 미국 기업들이 컴퓨터 운영체계를 장악하여 글로벌 컴퓨터 산업에서 위세를 떨치던 시절을 연상케 하는 행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 미국의 풀스택 AI 패키지 구상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대의 디지털 국제질서에서도 다시 한번 패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 행보에 중국이 반기를 들었다. 미국의 AI 액션플랜이 발표된 직후인 2025년 7월 26일 중국은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AI대회(WAIC)에서 '중국판 AI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자체 개발한 '오픈소스 AI'를 내세워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돕겠다는 제안이 주목받았다. 이를 위해 중국은 개도국들의 '법·정치적 주권'을 옹호하는 글로벌 AI 거버넌

스의 구축을 주장했으며, 그 일환으로 'AI 분야 유엔'을 연상시키는 '세계AI협력기구(WAICO)'의 설립을 제안했다. 미국이 자국 표준의 해외 확산을 통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사실상 패권 질서를 구상한다면, 중국은 국민국가의 정부를 대표로 하여 구성된 기존의 국가 간 국제기구의 틀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미중 질서 구상 경쟁의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그 구상의 대결 구도가 단순히 미국의 '폐쇄형 패권'과 중국의 '개방형 연대'를 넘어서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요소를 품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폐쇄형을 고수하던 오픈AI가 부분적이지만 개방형의 요소를 도입하거나 최근에는 한국, 일본, 영국, 중동 국가들에 대한 투자와 협력에 나섰으며, 엔비디아나 AWS 등도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도 단순한 개방형으로만 볼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실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선상의 개도국들에 대해서 자국의 주권을 확장하려는 '사실상 패권'의 역설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딥시크나 문샷AI가 보이고 있는 행보는 오픈소스 추진의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하드웨어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미국 AI 반도체에 대한 종속을 피하려고 개방형 표준을 스스로 부정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중견국의 소버린 AI 담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다층적인 AI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틈새에서 독자적 공간을 마련하려는 중견국들의 행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자주 거론되는 말이 '소버린(Sovereign) AI'이다. 쉽게 말해, 소버린 AI는 외국에 의존하지 않은 AI 모델을 자주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위한 기술 역량과 더 나아가 자주적 AI 생태계까지 구축하자는 담론이다. 한국에서도 수년 전부터 국내 AI 기업들이 나서고 얼마 전부터는 정부도 지원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다양하게 거론되는 소버린 AI는 개념적으로는 아직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미래 AI 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실천적 담론' 정도로 보고 국가적 차원에서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이나 엔비디아와 오라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소버린 AI라는 말을 전략적으로 원용하곤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버린 AI는 중견국들의 담론이자 전략이다. 미중 빅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 분야의 기술 종속이 곧 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견국 위기감의 발현이다. 미중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상 거의 모든 AI 분야의 풀스택을 장악하는 미래 디지털 국제질서에서 이들 중견국은 '형식적 주권'만 유지할 뿐, 핵심 AI 기술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은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발동했다.

이러한 담론을 바탕으로 프랑스, 인도, 싱가포르 등이 소버린 AI 달성을 위해 분주히 나섰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결속하고 중국이 개도국 진영을 결집하는 틈바구니에서, 저마다의 AI 역량과 지정학적 위상을 지렛대 삼아 독자적 AI 공간을 확보하려 시도한다. 그 기저에는 당장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외세에 의한 기술 종속을 떨쳐내고 각국 언어·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당위적 주권'의 개념이 깔려 있다. 이 연장선에서 소버린 AI를 추구하지만, 역량은 부족한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자는 '정체성 연대'의 담론도 커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주권 수호의 맥락에서 본 소버린 AI의 담론과 전략은 유럽에서 시작됐다. 그중 대표 주자는 프랑스인데, 미스트랄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국의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독일도 '가이아-X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형 클라우드로 및 AI 주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알레프 알파가 독일판 소버린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

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오픈AI와 '소버린 AI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해 영국 내 소버린 AI 구축의 목표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유럽 국가의 소버린 AI 담론은 각국의 기술 역량을 보완하는 '당위적 규범'의 시각에서 제기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아시아에서 소버린 AI의 목소리를 높이는 대표적인 나라는 인도인데,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등과의 활발한 기술 협력을 펼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일본은 오픈AI와 협력해서 확보한 자체 기술로 소버린 AI를 개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엔비디아와 협력해 동남아시아 언어에 특화된 '씨라이언(Sea Lion)'이라는 AI 모델을 만들었다. 대만은 중국 플랫폼에 대항해 자국의 문화 주권 보호를 위해 AI 챗봇인 '타이드(TAIDE)'를 구축했다. 이들 아시아 국가의 소버린 AI 담론의 특징은 중국의 공세로부터 자국의 '언어·문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협력에 주력한다는 데 있다.

중동 국가들의 소버린 AI 행보도 큰 주목거리다. 사우디는 '비전 2030' 전략과 연계하여 AI 기술 외교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시기 미국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했던 동안에는 중국이나 여타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했지만, 트럼프 2기를 맞아 다시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팔콘(Falcon)'이라는 자체 모델로 소버린 AI 확보를 시도했지만, 시장성 확보에 실패한 이후로 오픈AI와의 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중동 국가의 소버린 AI 담론은 '탈석유' 시대의 발전계획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미국 등과의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들 국가의 소버린 AI 담론과 전략에서 각국이 보유한 자체 기술 역량만큼이나 미중 사이에서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상이라는 변수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방 진영에서도 프랑스나 독일은 자체 역량을 바탕으로 한 자주적 전략을 추구하나, 영국이나 일본은 미국 주도 질서 내의 기술 협력을 선호한다. 아시아 지역의 인도나 싱가포르, 대만의 소버린 AI에서도 중국 견제를 목표로 내건 미국과의 협력이 주요 변수다. 중동 지역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차세대 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기술 역량의 확보를 위해 미중 사이를 오가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소버린 AI 담론과 AI 생태계 전략

이러한 맥락에서 본 한국의 소버린 AI 담론은 고유한 언어 정체성의 보호와 이를 지원하는 데이터 인프라의 사회·문화적 기반 확보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됐다. 이후 자주적 기술 역량 확보 차원에서 국산 '기반 모델 개발론', 외산 모델이라도 이를 각 분야에 잘 적용해서 쓰자는 '특화 모델론', 더 나아가 글로벌 AI 생태계와의 접점을 강조하는 '협력적 주권론'으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주권론', '안보·국방 분야 예외론', '중견국 AI 연대론' 등도 제기됐다. 이들 소버린 AI 담론은, 특정 기업의 마케팅 수단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소버린 AI가 한국에 주는 의미는 단순한 국산 AI 제품의 개발이 아니라 자주적 AI 기술 역량의 구축에서 찾아야 한다. 더 나아가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서 외국에 구조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자강적 AI 생태계의 구축에 있다. 소버린 AI는 미중 AI 패권경쟁의 와중에 한국이 당면한 중견국의 존재론적 고민도 담고 있다. 강대국 주도의 디지털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적어도 기존의 경쟁력 있는 부문이나 국가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주권적 역량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담론이 시대착오적인 '디지털 쇄국론'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 시대의 코드에 맞는 개방적 발상과 미래를 지향하는 전진적 자세가 필수다.

대외전략 차원에서 본 소버린 AI 담론은 한국의 외교 담론과도 연결된다. 한국의 소버린

AI는 한미동맹이나, 미중균형이나를 묻는 이분법을 넘어서 중견국의 연대외교 전략을 지향한다. 한국 혼자서 소버린 AI를 구현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비슷한 고민의 AI 중견국들과 손잡고 협력하자는 담론이다. 소버린 AI가 필요하지만, 개발 역량이 없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이 '신뢰할 만한 AI 모델'을 수출하자는 경제적 속내도 바탕에 깔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범용 AI 모델이 커버하지 못하는 '다양성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디지털 경험과 역량이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 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국의 소버린 AI 담론은, AI 혁신생태계 전략과 관련하여 '폐쇄형'과 '개방형'의 어느 AI 진영과 연대하느냐의 고민과 연계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은 비싼 비용을 치르고 미국의 폐쇄형 AI 모델을 계속 써야 할지, 무료로 제공되는 중국의 개방형 AI 모델을 새로 채택할지의 문제와 통한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각기 비즈니스 이익을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지정학적으로 미중 사이에 낀 중견국인 한국이 선뜻 중국발 개방형 모델에 편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AI 모델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 걸쳐 가동되는 상황에서, 여태까지 유지해 온 한미관계 전반의 밀착 기조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국발 개방형 모델을 선불리 멀리하기도 힘들다. 중국 시장 진출 문제는 고사하고라도, 중국 플랫폼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동남아 지역 진출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른다. 만약에 우리가 멀리해서 호환이 잘 안되는 AI 모델을 채택한 중국 기업이 이 지역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이는 일종의 '표준의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다분하다. 결국 이는 플랫폼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최근 안으로 웅크리는 미국의 지배 플랫폼 위에서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지, 개방적으로 팽창하는 중국 주도 대항 플랫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의 문제를 의미한다.

요컨대, 향후 한국의 AI 국가전략은 단지 기술역량을 기르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중 양국의 기업들이 제시하는 AI 혁신생태계 표준의 선택 문제인 동시에, 더 나아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안보 전략적 선택의 문제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역량의 규모나 지정학적 위치, 국제사회적 역할 등에서 '중견국'이기에 한국이 겪을 수밖에 없는 '3중 딜레마'라는 차원에서 AI 국가전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유행처럼 거론되는 소버린 AI 담론을 '말 잔치,'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더 나아가 좀 더 실효성 있는 AI 국가전략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풀스택 AI 패키지'를 지향하지만 개방적인 국제협력을 동시에 모색하는 유연한 소버린 AI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소버린 AI 담론은 향후 한국이 추구할 전략의 실천적 구심점으로서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끝/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사이버안보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